

‘上低下高’ 옛 말... 하반기도 반도체·디스플레이 ‘부진’

9월 수출액 반도체 -31%·디스플레이 -64%
D램·낸드 등 메모리반도체 단가하락 악영향
LCD ‘한계원가’ 근접... 對中 수출은 ‘반토막’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하반기가 절반 지난 상황에서도 회복 기미를 보이기에는커녕 수출 부진이 악화되면서 ‘상저하고’(上低下高) 실적 흐름도 깨지고 있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달 수출액은 447억달러로, 전년 동기 506억달러 대비 11.7% 감소했다. 특히 수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는 이 기간 24.7% 줄어든 86억달러에 그쳤다. 당초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국제 반도체 협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감소 폭이 커지면서 ‘상저하고’의 벽마저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올 상반기 중 반도체 수출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은 5월 마이너스(-) 29.2%가 가장 큰 낙폭이었지만, 8월 -30%까지 떨어졌고 지난달 감소율은 더 확대됐다. 이는 D램 국제 시세가 1년 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데다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D램 익스체인지 집계 결과 PC용 DDR 8Gb D램 고장가격은 올해 1월 평균 6달러에서 9월1일 현재 2.94달러로

반토막났다. 이 기간 낸드플래시 고정거래가격도 1월 평균 4.52달러에서 4.11달러까지 하락했다.

반도체 불황 지속으로 SK하이닉스는 올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0% 이상 하락한 4000억원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시장 기대치를 상회한 7조원대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반도체 부문은 전분기보다 감소한 3조원 초반대를 기록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박유악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은 메모리의 출하량이 예상 대비 호조를 기록했지만, 원가 개선의 폭이 부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디스플레이산업도 녹록치 않다. 우리나라의 디스플레이 수출액은 지난달 3억6400만달러로, 전년 동기 10억2200만달러 대비 64.4% 감소했다. 수출 품목 중 가장 큰 낙폭이다. 디스플레이 부진은 중국 패널업체들이 LCD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대(對)중국 수출이 대폭 감소한 영향이다. 디스플레이의 중국 수출은 1년새 53.1% 줄었다.



당초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국제 반도체 협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감소 폭이 커지면서 ‘상저하고’의 벽마저 허물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시정연설 모습. 사진=시정경제DB

여기에 중국 업체들이 10세대 이상 LCD 생산설비를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공급과잉 현상을 초래, 글로벌 패널 가격이 크게 줄어들면서 경쟁력을 상실한 상태다. 증권가에서는 LG디스플레이의 LCD가 이미 ‘한계원가’에 근접한 것

로 보고 있다. 이미해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중 무역협상 난항 등 불확실성 증가로 6월부터 가격 하락폭이 확대됐다”며 “LCD 가격은 생산원가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 말했다. 이에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LCD 사업을 축소시키고 OLED 등 차세대 패널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최근 ‘신규 투자 및 삼성생력력 협약식’을 갖고 오는 2025년까지

‘QD 디스플레이’ 생산시설 구축 및 연구개발에 대한 총 13조1000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LCD에서 ‘QD 디스플레이’로 전환하고 ‘QD 디스플레이’ 양산라인인 ‘Q1라인’을 구축할 방침이다.

LG디스플레이 또한 OLED로의 사업 구조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LCD TV 개발 조직을 통합하는 등 LCD 관련 조직을 축소하고 대형 OLED와 중소형 P-OLED 사업 분야로 전환 배치를 서두르고 있다.

이처럼 한국 주요 산업이 흔들리면서 경제성장률 전망도 어두워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로 수정했다. 지난 4월 2.6%에서 반 년 만에 0.6%p 낮춘 것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기준금리를 0.25%p 인하, 2017년 6월 이후 2년4개월 만에 최저 수준인 연 1.25%로 낮아졌다.

재계 한 관계자는 “향후 국내 경제는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 둔화,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다”면서 “미중 무역분쟁 등 주요 이슈 역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도 완화되는가 싶으면 다시 커지고 있고 주요국 경제지표도 개선조짐이 뚜렷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성진 기자 isj@meconomynews.com

Cannes Lions 수상작 지면 전시



FOR EVERY SIZE OF IMAGINATION

Print & Publishing Bronze Lion Campaign

Title: EMPIRE STATES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Client: DKSH (THAILAND) LIMITED
Agency: OGILVY GROUP THAILAND, Bangkok

Product: LEGO 레고
Copy: For every size of imagination 레고와 함께라면, 너무 큰 것도 너무 작은 것도 없습니다.

3기 신도시 본격화... 거세지는 2기 주민 반발

신도시 자족도시화 추진
검단·운정 2기 신도시 직격탄

‘2021년말 첫 분양’이라는 목표를 갖고 3기 신도시 건설 사업이 시작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남양주 왕숙·왕숙2·하남 교산·인천 계양·과천을 공공주택지구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공공주택지구 지정된다는 것은 사업이 본격화된다는 의미다.

이번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5곳은 2020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2021년 공사 착공, 2021년 말 첫마를 시범사업 등을 거쳐 주택 공급을 시작한다. 이번 공공주택지구의 총면적은 여의도 면적(290만㎡) 7.8배에 달하는 2273만㎡다. 이들 5곳은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19일 부동산 안정 대책의 하나로 발표한 3기 신도시 조성 예정 지역으로 계획상 12만 2000가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다.

국토부는 이번 지구 특징으로 3가지를 소개했다. 먼저 전체 면적의 30%를 ‘공원·녹지’로 조성한다. 사람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30%를 ‘자족용지’로 조성한다. 자족용지란 신도시 또는 택지 개발지구의 자족기능을 높이기 위해 도



국토부의 3기 신도시 추진에 반발해 집회를 벌이는 1-2기 신도시 주민들. 사진=시정경제DB

입한 용지다.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 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연구소 일반 업무시설(오피스 제외) 등을 설치할 수 있다. 3기 신도시 내에 일지리와 주거 시설을 함께 건설해 3기 신도시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을 교통 대책에 투자하기로 했다.

문제는 2기 신도시의 집값 하락과 주민들의 반발이다. 3기 신도시 사업이 본격화되면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3기 신도시보다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이 가장 클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에서 수용

할 수 있는 가구 수는 남양주 왕숙지구가 6만6000여 가구, 인천계양이 1만7000여 가구, 하남교산이 3만2000여 가구, 과천이 7100여 가구 등 총 11만5000여 가구에 달한다. 오는 2021년부터 주택공급이 시작되면 내년부터 2기 신도시 집값에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검단과 운정이 가장 큰 피해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대영 경제만평 리서치팀장은 “서울 접근성이 더 좋은 3기 신도시들이 나오면 당연히 비교적 서울 접근성이 부족한 검단신도시와 운정신도시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규호 기자 jkh@meconomynews.com

한남3구역 재개발 수주 전쟁... 조건 남발하는 건설 3사

업계선 “그게 가능하겠나”

국내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인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이하 한남3구역) 수주를 위한 건설사의 ‘쟁의 전쟁’이 시작됐다.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모두 파격적인 내용을 제안했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시세를 훨씬 웃도는 ‘최저 분양가 보장’ 등 파격적인 사업조건이 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GS건설은 조합에 일반분양가 3.3㎡당 7200만원까지 보장해주겠다고 제안했다. 만약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에는 100% 대물 인수 조항도 추가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 한한다는 단서조항을 넣었지만 현재 상한

제 적용지역이 아니어도 서울 전역이고 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묶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파격적인 조건이다. HUG 조건으로 최고 분양가를 받는 강남·서초도 현재 일반 분양가가 3.3㎡당 4800만원대에 그치고 1년 단위의 인상폭도 5%로 제한돼 있다.

GS건설은 조합원 분양가 3.3㎡당 3300만원 이하 보장, 상업시설 분양가 주변 시세의 110% 보장,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보장, 조합원 부담금 입주시 100% 보장, 조합사업비 전액 무이자, 조합원 전원 한강조망세대·테라스하우스·펜트하우스 100% 보장 등 3사 가운데 가장 많은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맞서는 현대건설은 가구당 5억원의 최저 이주비를 제시했다.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로 정비사업의 이주비가 대폭 축소돼 조합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LTV 70% 이내에서 최저 5억원까지 회사측이 책임지고 빌려주겠다는 것이다. 조합원 추가 부담금도 입주 1년 후에 전액 납부하도록 유예해줄겠다고 했다. 대림산업은 이주비를 LTV 100% 보장과 함께 임대아파트가 전혀 없는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제안했다.

건설업계는 이러한 사업조건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많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현대건설은 GS건설과 대림산업이 제시한 ‘혁신실제’는 중대한 설계변경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공공관리제 지침에 위배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시내 임대아파트 의무 비율(10~30%)이 정해져 있는데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성정 기자 sjp@meconomynews.com